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②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집행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④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주무부장관의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참여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가) 와/과 협의를 거쳐 (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은/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다) 은/는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확정된 (라) 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가) | (나) | (다) | (라)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집행계획 |
| ② 국무총리 | 대통령 | 국무총리 | 집행계획 |
| ③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행계획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통령 | 행정안전부장관 | 시행계획 |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 ③ 국회·법원·헌법재판소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는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훈련대상자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가 인력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 그 훈련통지서의 발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여야 한다.
- ③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있지만, 물적자원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없다.
- ④ 인력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은 인력훈련대상자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과 그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ㄴ. 훈련실시명령은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 ㄷ.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선박의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그 선박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ㄹ.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인력훈련통지서는 주무부장관이 발급하여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축물자의 소유자가 그 물자의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인수를 위한 인도.인수사무소는 시.도지사 설치하여야 하고, 인도.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도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ㄹ. 시.도지사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는 경우, 인도.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장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실을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한 자가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2년마다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 ④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의 설치 등 민방위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 ② 시·도지사가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에는 지하 양수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 ②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폰성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 ④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를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문 1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 12. 15.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한다. 충청북도 A군 B읍에 주소를 둔 甲은 통.리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 대원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B읍의 읍장이 2021. 12. 10.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 ② B읍의 읍장이 甲에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甲이 교육훈련 통지를 받고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 ④ 甲이 직계존속의 장례로 인해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면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B읍의 읍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6. 다음 사례에서 민방위기본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큰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9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장애 등급 제4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은 300만 원이고,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으로, 양자 모두 최근 3년간 변화가 없다.

- ① 8,100만 원
- ② 9,000만 원
- ③ 1억 800만 원
- ④ 1억 1,700만 원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ㄴ.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고, 그 자녀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원에 대한 소집통지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ㄹ.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 수임군부대의 장이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기한은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이다.

- ① \neg , \perp
② \neg , \sqsubset
③ \perp , \sqsubset
④ \sqsubset , \sqsubset

문 20. 예비군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결혼 일자를 정한 후 훈련명령을 받은 甲이 훈련일과 자신의 결혼 일자가 겹쳐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본인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 ㄴ.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乙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없다.
- ㄷ. 훈련명령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된 丙은 훈련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훈련 연기원서를 丙의 고용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ㄹ. 지방의회의원인 丁은 훈련일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이 아닌 때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① \neg, \perp
- ② \neg, \sqsubset
- ③ \perp, \sqsubset
- ④ \sqsubset, \sqsubset

문 2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장공비가 2021. 11. 1. 경기도 A 지역에 침투하였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그 무장공비의 도주로로 예상되는 경기도 B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2021. 11. 3. B 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 명령을 하였다. B 지역 주민 乙은 피난 명령으로 인해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었다. 甲은 2021. 11. 7. 乙에게 해당 농작물의 시가를 100만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① 甲은 피난 명령을 하려면 피난 명령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② 甲은 피난 명령 내용을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乙이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乙이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장애보상금을 받았다가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 ② 육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문 23. 예비군법령상 甲 ~ 丁에게 해당하는 법정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甲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乙을 검문하자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대원 丙이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한 경우
- 전시.사변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戊가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 <보 기> —————

- ㄱ. 甲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乙은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 ㄴ. 甲에 대한 법정형보다 戊에 대한 법정형이 더 경하다.
- ㄷ. 乙의 행위가 무장공비와 교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乙과 丁에 대한 법정형은 같다.
- ㄹ. 丙과 달리 戊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26.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동원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정형에 구류가 포함된다.
- ㄴ.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응소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ㄷ. 무장소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진압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 ㄹ.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이 된다.
-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 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ㄷ.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ㅁ. 시·도지사는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u>ㄱ</u>	<u>ㄴ</u>	<u>ㄷ</u>	<u>ㄹ</u>	<u>ㅁ</u>
①	O	O	X	O	O
②	X	X	X	X	X
③	O	X	O	O	O
④	X	X	O	X	X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가) 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나)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다)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 0 0
명				
②	5월 31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50명
③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2 0 0
명				
④	10월 31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1 0 0
명				

문 30. 다음 사례에서 ㉠ ~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산업시설은 X시 Y동에 소재하고 있다. Y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산업시설이 마비되자, X시의 시장 甲은 질서의 유지를 위해 Y동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급수 수단의 확보에 종사하고 있는 乙에게 Y동에서의 대피를 명하였다. ㉡甲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로 인한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Y동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Y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 중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되자, ㉢甲은 Y동의 명칭 및 위치, 관계인의 인적사항, C등급의 평가 사유를 X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甲은 Y동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다.

- | | |
|--------|--------|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②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 선포된 재난사태를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조치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을 실시하였다.
- 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필요하여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하였다.
- ㄷ. 재난이 발생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를 동원하였다.
- ㄹ. 시.도지사가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의 운항이 필요하게 되어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하였다.
- ㅁ.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하면서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ㅁ
- ④ ㄷ, ㄹ, ㅁ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자연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심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산불로 인한 사회재난의 징후를 식별한 경우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면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소방본부장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에서 퇴거조치를 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A도에 발생한 자연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인 경우,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기준은 A도의 조례로 정한다.
- ㄷ. B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국가의 시설과 관계되는 재난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에 따라 B군의 군수로부터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가 응급조치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ㄹ. C군의 군수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원을 D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E군부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응원을 받은 C군의 군수가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5. A군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A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자,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A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군의 군수는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A군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A군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A군이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A군의 군수는 A군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없다.

법령 I - 헌법

문 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헌법 제75조가 요청하는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은 법규명령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먼저 그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견 가능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행령에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위임입법의 포괄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ㄴ.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법률에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의 일반원칙으로서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헌법 제95조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ㄷ.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조항은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ㄹ. 공법적 기관의 정관 규율사항에 있어서 그러한 정관의 제정주체가 사실상 행정부에 해당하거나, 기타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엄격한 위임입법의 한계가 준수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2.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정무위원회 소관사항이다.
- ②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는 심사대상 국회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문 3.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 ② 공무담임권은 소선거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로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문 4. 재외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③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또는 헌법 제2조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

- 문 5.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②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나,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더라도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문 6. 역대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8년 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3인과 국회의원 5인이 재판관이 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② 1960년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및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 ③ 1962년 개정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 ④ 1972년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및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문 7.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그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고,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협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 ③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누구든지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 ④ 입법자는 법률로써 옥외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및 방법적인 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문 8.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보호영역으로서 재산권이 문제되는 경우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우선함에 따라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는 배제된다.
-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바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원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문 9.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1조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② 대학은 학문의 자유의 주체이고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지므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부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목표를 정하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인격의 형성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국어교육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정서와 문화가 배어 있는 방언에 기초한 교육을 할 것인가, 표준어에 기초한 교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 1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②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로는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가 있다.
- ③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④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문 11.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를 의미하나, 국고 채무부담행위는 제외된다.
- 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나,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ㄷ.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ㄹ.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액 내용 및 사유를 적어 국무회의 14일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정부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그 증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국무회의 7일 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2. 국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임시회는 정부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④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문 13.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 ②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 ③ 재판관은 탄핵결정이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④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문 14.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업허가구역 밖에서의 조업행위를 기소한 형사재판에서 어업허가구역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해상경계에 대한 행정관습법은 처벌의 근거조항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조업구역을 확인하는 고려요소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②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관습법도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 ③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 등에 대한 재구속의 요건 등을 가중하는 것이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어받아 이를 ‘법률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내용의 ‘헌법원칙’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마련하였으나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문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②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역시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만 포함될 뿐이고 공무원의 근무평정·행정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에 대한 행정감찰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